

“10년을 전망하며 조직을 강화하자”

14일, 46차 임시대대 개최...임원 임기 3년·책임 영역별 부위원장 간선제 등 규약개정안 부결

금속노조가 1월 14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46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이번 임시대대에서 산별노조발전전략에 관한 토론과 함께 규약 개정 건,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대의원 선출기준(안) 승인 건, 현장 발의안 등을 상정했다.



대의원대회에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한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노조 임시대의원대회를 찾아 연대투쟁을 호소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금속노조 발전을 위한 ‘준비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이번 임시대대는 금속노조의 ‘10년 전망과 5년 계획’을 준비하는 출발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30~40대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세대가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활동이 조직 확대와 강화”라며 금속노조 세대별 전망을 준비하는 2019년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산별노조 발전전략위원회 보고서에 관한 토론을 마친 대의원들은 제적의원 745명 중 538명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시작했다.

회순에 대한 대의원 찬반표결 결과,

현장 발의한 ‘구미지부 교선부장 임** 면직 촉구 결의안 채택 건’과 ‘울산지부 고강알루미늄지회 장기투쟁 대책 기금 조기 지급 특별 결의 건’을 우선 토론했다. ‘임** 면직 촉구 결의 건’은 찬반 토론 끝에 재석 대의원 454명 중 찬성 373명으로 통과됐다. ‘고강알루미늄 지회 장투 기금 건’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대의원대회에서 책임 영역별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노조 임원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하자는 규약 개정 건은 380명의 대의원이 투표해 부위원장 간선제는 찬성 170명, 반대 210명, 노조 임원 임기 3년 연장 건은 찬성 173명, 반대 207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민주노총 파견 중앙위원 대의원 선출 기준(안)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했

한 달이 넘도록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으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라고 분노했다. 김미숙 씨는 ” 아들의 바람대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이 되고 서민이 인권을 찾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라고 호소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출소 뒤 처음 금속노조 대대에 참석해 격려사를 했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노동자가 파업해도 생산을 멈출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깨기 위해 무엇을 할지 절박한 심정으로 돌아보자”라며 “노동자 투쟁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금속노조 조합원은 우리 직원 아니다”

삼성테크윈지회, 한화그룹 노조파괴 규탄 기자회견 열어... “김승연 한화 회장 지시 있었을 듯”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31일 한화테크윈 회사 관리자 이훈 명을 ▲현장관리자 포섭 ▲금속노조 조합원 성향 분류 ▲조합원 탈퇴 종용 ▲조합원 차별 ▲교섭태도와 어용노조 육성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했다.



말라”는 발언을 하는 등 금속노조 파괴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한화는 금속노조 가입자 현황을 조사해 조합원을 분류했다. 한화는 현장관리자들에게 금속노조 조합원을 탈퇴를 지시하고 노조파괴 실적을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화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직, 반장 직책을 갖고 있던 조합원들이 탈퇴했다.

금속노조는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한화그룹 최고결정권자인 김승연 회장의 지시 없이 벌일 수 없다고 지적하고, 김승연 회장도 수사 대상에 올려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노조 조합원만 임금 소급분과 타결금을 지급했다. 사업장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쟁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교섭을 질질 끌며, 기업노조에 성과를 몰아준 셈이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1월 16일 국회 정론관과 한화테크윈 창원사업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의 민주노조 파괴 행위를 규탄했다. 지회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포함한 책임자를 엄중히 수사해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방산업체 파업금지법 악용해 노조파괴
문제는 방산사업을 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지상방산이다. 이 두 개 법인에서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가 교섭대표노조지만 한화는 이들 사업장에서 교섭을 지연하며, 기업노조와 개별교섭을 벌였다. 한화는 기업노조와 임단협 타결을 하며,

관리자 시켜 금속노조 탈퇴 경쟁 부추겨
창원지방검찰청이 기소한 배 아무개 전 전무는 관리자 직급인 직장, 반장에게 금속노조 탈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배 아무개 전 전무 간부 수련회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은 우리 직원으로 보지

노조는 김승연 회장 처벌과 함께 사실상 회사에 노조 선택권을 주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한화가 노조파괴를 위한 차별을 중단하고 지회와 조속히 단체협약을 맺으라고 경고했다.

“자동차 판매대리점 노동자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다”

서울고법,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성 인정...지회, “노조탄압 그만, 판매시장 정상화 나서자”

서울고법은 1월 16일 현대자동차 전주 금암대리점 노동자들이 노조법상 노동자라며 이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판결 뒤 성명을 통해 “오늘 서울고법 판결을 기점으로 자동차 판매대리점 노동자가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2016년 현대자동차 전주 금암대리점 소장은 노조 탈퇴를 거부한 판매노동

자 이훈 명을 해고했다.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들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금암대리점 소장은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행정법원(1심)은 자동차 판매대리점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서울고등법원도 이들이 노조법상 노동자임을 인정했다.

지회는 “현대자동차 원청은 대리점 노동자와 직영영업소 노동자를 경쟁시켜 이득을 취하고, 대리점주를 내세워 노사관계를 파탄 내지 말고 대기업으로서 사회 책임을 다하라” 라고 일갈했다.

지노위와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인 계약해지(해고)를 취소하고 교섭에 응하라고 판결했지만, 현대자동차와 대리점주들은 계속 소송을 내며 판매노동자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